

# ‘국회 소집’ 후 첫 여야 합의 오는 26일 국세청장 청문회

### 한국당도 일정에 합의...민주 김정우 간사 “만시지탄이나 다행”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간 합의를 이같이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한국당의 상임위 거부 등 반발이 예상됐지만 한국당이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구는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구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여야 3당 간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국세청장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위해 전날 한국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물밑 접촉을 했다”며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는 말해달라고 어제 밤에 최후통첩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한국

당이 국세청장 청문 절차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늦게 열리는 만큼 ‘인신공격성’ 청문회보다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능력, 전문성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국세청장 일정을 협의하면서 가장 난점이 제왕적 원내대표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원내대표단의 지시리면서 한국당 기재위 간사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늦게라도 협상에 임해줘서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청문회 참여를 국회 복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복귀인지 청문회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전체 복귀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이정미 “영수회담 또 제안 黃, 대권늘음 정치 풋내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한 차례 더 제안한 데 대해 “자신이 제1야당의 대표자이지, 대권늘음에 재미 붙인 정치 풋내기”라고 꼬집어 분명한 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을 방해하며 존재감이나 과시하는 지금 같은 태도로는 기대하는 대권기도에도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이번에도 스스로 한국당 패싱을 자초했다. 역시 이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요구, 끈질기게 경제실정 청문회 수용 등 민생과 상관없는 민폐성 정치공세만 계속하며 국회등원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등원해야 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고, 할 일은 하자”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은 끝내 등원을 거부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라며 “국회 무력화 배후에는 황교안 대표의 의도적 강경론이 있다. 원외인사인 황 대표가 자신의 대권행보를 위해 국회를 불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시진핑 방북에 남북회담은 밀리나靑 “시기에 매달리진 않아”

청와대는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달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관해 정상회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 정상회담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며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남북 정상회담 시기)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이점이 될지, 이후가 될지 모르겠

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진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남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닐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 평화일 것”이라며 “그 길에 있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순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담 성사 자체보다는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스

Photo漫評

시각차

여야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는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원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변론만 문제인’ 인사들에 대한 사정을 이여기기 위해 윤지검장을 낙점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홍의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할 적임자라고 윤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지검장은 아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제인 사법’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고 주장했다. 시민 등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글=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스1

### 한국당 “닥치고 총선용 추경, 절대 안 돼...나라 망할 것”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의원 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재정 무한정 확대하면 부작용 후유증 커”

김경림 의원은 “이런 추경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민생 추경은 근거도 없고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 분석이 엇박자이며, 빚내는 재원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재정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확대했을 때 부작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 가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사례에 다 나와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홍보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려는 상황”이라며 “보수 정당의 작은 정부 민간 주도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적립 하자”고 독려했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추경 분석에 들어간 의원들은 추경안에 따라오는 국민적 부담과 실효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런 추경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민생 추경은 근거도 없고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 분석이 엇박자이며, 빚내는 재원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에 비해 재정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고, 내년 총선 중심의 청와대 포퓰리즘 문제”라며 “진정으로 상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청문회를 하는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보한다 해도 빛내서 하는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은 “제 이름을 걸고 추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우스갯소리로 발언을 시작해 “이 추경은 처음부터 미세먼지 비판이 강하니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낸 카드이고, 경제실정을 달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자 시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법에 보면 기금을 정부가 편성하고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해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안 해서 민생 대응이 안 된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며 “지금도 급하면 자체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편성해준 470조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않았다. 이 시기에는 1~2월이면 보통 집행률이 10~20% 정도”라며 “(돈을) 풀지도 않은 상황에서 2~3월부터 추경 쓰겠다. 빚부터 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고 국가 부채로 망국으로 가거나 세금 폭탄을 젊은 세대에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추경 논쟁이 아니라, 지금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재정 확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추경을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착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